‘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논란

“이름 공개는 당연” Vs “여론몰이식 안돼”

현직 헌재소장·대법관 포함
변호사단체 등은 찬반 엇갈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일 오후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결분석 보고서’ 별첨자료에는 알려진 대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공현·민형기 헌법재판관,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 등 현직 고위법관 10여명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전 대법원장 윤관, 최종영, 김용철 등 전직 고위법관 100여명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판사의 경력이나 몇 건을 재판했는지, 동명이인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

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관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며 실명 공개를 강행했다.

그러나 실명공개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되는 과거사 정리 작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팽배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심리한 판사에 포함된 현직 고위 법관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대법관 4명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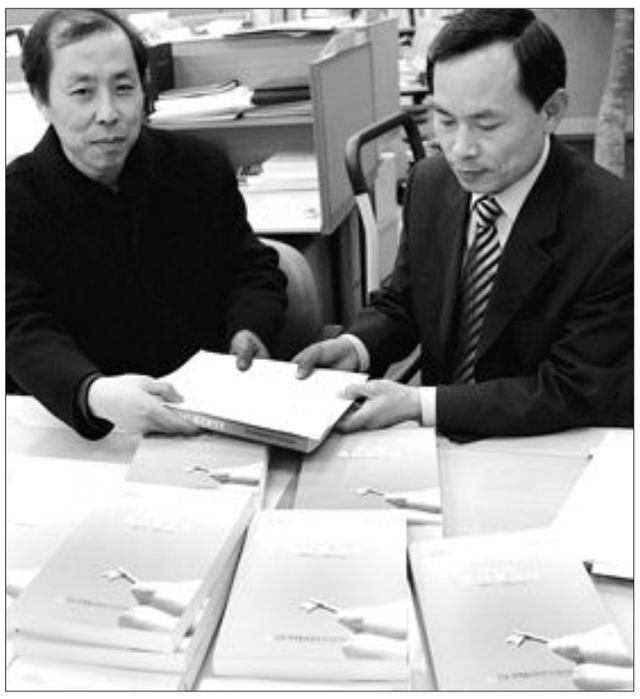
재경 법원의 한 법원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안 난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다른 법원장급 인사도 비서진을 통해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판사 명단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부정적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변호사단체 등 재야에서는 단체의 성향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에서 “유신헌법도 당시에는 다수 국민의 찬성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비난 대상으로 삼을 경우 다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은 사법부의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과거사위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盧 “4년간 할 일 책임있게 했다”

“넘겨받은 위기 무난히 관리”
참여정부 4돌 심포지엄 자평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일반 국정과제에 있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했다고 자부한다”며 “참여정부는 어떻든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에서 재임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전 정부들이 넘겨준 밀린 과제를 대부분 해결했고,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뒤로 미루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언론관계와 관련, “언론에 굴복하지 않은 것, 공무원이 언론에 당당하게 잘못된 보도나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든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여기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과거 시대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암적요소였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해소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 일부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을 겨냥한 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일해공원 반대” ‘전두환(일해) 공원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민주화운동 단체와 함께 일해공원 명칭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며 한나라당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긴급조치 사범’ 이례적 무죄 선고 양 영 태 변호사

“판사들 대부분 형량 최소화 노력했죠”

“모두 시대를 잘못 만났지, 당시 고민하지 않은 판사가 있었겠습니까. 정치성을 띤 일부 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판사들은 (긴급조치사범에 대한)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사위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을 진행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지난달 31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난 양영태(67)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났다. 그는 실명이 공개된 판사들 중 이례적으로 긴급조치 위반사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1977년 광주고법 부장판사였던

감시대상·승진서 밀려

그는 반공법 위반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민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이 상가(喪家)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으로 집권했다’는 발언을 해 기소됐는 데, 당시 김씨의 말을 들었다는 증언자가 3~4명인 데 반해 듣지 않았다는 증언자가 7~8명에 달한 데다 후자 쪽의 진술이 더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판사 시절에도 작은아버지가 군에 간 조카에게 ‘현 시국이 뒤숭숭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박정희 대통령을 비방한 편지를 보냈다가 군 검열에 걸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편지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보는 것이어서 공연성(公然性)이 없고 유포하는 것이 아닌 만큼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차례 무죄를 내린 그는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됐고, 번번이 승진 인사에서 밀려났다.

그는 “사무실 전화도 도청을 당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선배로부터 청와대에서 뒷조사를 했다는 소리도 들었다”면서 “특히 당시 남동생이 서울대 의대 재학중 학생운동을 하다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모두 죄인 취급은 곤란

혐의로 검찰에서 10년을 구형 당한 뒤로는 더욱 감시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판사들끼리 공식적으로 자리를 갖지는 못했지만, 삼삼오오 모여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 우리가 판사냐’는 자조와 함께, ‘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켜야 한다. 그래도 최소한의 형량으로 피해를 줄이자’며 위로하기도 했지요.”

그는 “당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암울한 시대의 법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번민의 날을 보냈다”면서 “과거사위가 공개한 판사들 명단 중 대부분은 이 같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모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우려한 것이다.

나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광주 서중·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4학년에 고시에 합격한 양 변호사는 ‘대법관의 꿈’을 접고 198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

“시멘트보다 소프트웨어”

문국현씨, 박근혜·이명박 공약 비판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꼽히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지난달 31일 “시멘트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지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나라당 대권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내륙운하 구상과 박근혜 전 대표의 한-중 열차페리 구상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권을 이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를 갖는 게 시기적으로 절박하고 효과도 빠르다고 본다”며 “토건 중심적으로, 국토의 부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한 국토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 사장은 “한중간 (열차페리) 연결은 국내 내륙운하보다는 나아 보인다”며 “우리는 산업시설이 내지가 아닌 임해공단에 있어서 바다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낫고 굳이 내륙운하를 이용할 이유가 없으며 배가 산으로 가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